

#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차 례

1. 배경
2. EU 경제안보전략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EU 집행위원회는 주요국의 경제안보전략 추진에 대응하면서 경제안보를 둘러싼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U의 첫 번째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함(23. 6. 20).
- ▶ 세 가지 우선순위(① 촉진 ② 보호 ③ 협력)에 근거한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험 식별 및 관리] 경제분야와 연관된 위험(△공급망 복원력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사이버 보안 △기술 안보 및 유출 △경제 의존성의 무기화 및 통상위협 등)을 신속히 식별하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복원력 제고 및 공급망 강화] EU 집행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EU 산업전략, 「핵심원자재법」, 「유럽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유럽방위기술 및 산업기반 전략, 단일시장긴급조치 등의 신속 이행과 유럽플랫폼 전략기술(STEP)을 통한 자원조달 원활화를 추진하고자 함.
  - [경제안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FDI Screening)에 대한 재검토,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통제,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통해 경제안보 위험에서 EU를 보호하고자 함.
  - [경제안보 협력] 경제안보를 둘러싼 정책대응이 일방적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국가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함.
- ▶ EU 경제안보전략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함.
  - EU 경제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한 완전한 배제가 아닌 위험 최소화'라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재검토 등은 일방적인 보호 무역조치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
  -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의 정의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간 경제안보 분야의 권한 조정 △경제안보전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화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됨.
- ▶ EU 경제안보전략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EU 정부간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 배경

■ EU 집행위원회는 주요국의 경제안보전략 추진에 대응하면서 경제안보를 둘러싼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U의 첫 번째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함(23. 6. 20).<sup>1)</sup>

-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지경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었으며, 전략적 경제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 중국 통신 공급업체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 최근 몇 년간 국가의 안보 이슈가 EU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함.<sup>2)</sup>
-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전통적으로 안보위협은 군사적 위협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팬데믹,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의 교란 등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보위협의 범위가 확대됨.<sup>3)</sup>

■ EU의 경제안보전략은 위험의 최소화 및 경제의 개방성 유지를 통해 EU의 자율성 강화 및 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도모함.

- 이 전략은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제3국과 역량을 공유하면서도 특정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축소함으로써 EU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2. EU 경제안보전략 주요 내용

■ [위험 식별] 경제분야 관련 위험이 빠르게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sup>4)</sup>

- 이 전략은 다음의 경제안보 4개 분야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안함.
  - ①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 복원력 관련 위험
  - ②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위험 및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
  - ③ 기술안보 및 기술유출 관련 위험
  - ④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 또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관련 위험

1) European Commission(2023),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JOIN(2023) 20 final.

2) Politico(2023. 6. 19), "EU's trade ideals face 'economic security' reality check,"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6. 27).

3)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와 안보의 불가분성에 기반한 경제안보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4)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Global integration and open economies have been a force for good for our business, our competitiveness, and our European economy. And that will not change in the future. But we also have to be clear-eyed about a world that has become more contested and geopolitical. This is why the topic of economic security has become a priority for us and for many of our partners. And today, Europe becomes the first major economy to set out a strategy on economic security. it will ensure Europe's sovereignty,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 years to come."

■ [우선순위] EU 집행위원회는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선순위를 강조함.

- [① 촉진] 단일시장 강화, 강력하고 탄력적인 경제지원, 기술 투자와 EU의 연구기술 및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EU의 경쟁력 촉진
  - 건전한 거시경제 및 결속 정책수단으로서 NextGenerationEU(NGEU)를 통해 미래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 글로벌 공급망 내 공급국 및 수출국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최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기후 중립 산업,<sup>5)</sup> 청정에너지, 핵심 원자재 등 전략적 영역에서 연구 및 산업기반 육성
- [② 보호]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통해 EU와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제한하면서 EU의 경제안보를 보호
  -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 및 통상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역외 보조금 △5G/6G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관련 EU 차원의 조율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등의 정책 제시
- [③ 협력] 무역협정의 추가 추진,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및 다자기구 강화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 [정책수단]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EU 경제안보전략은 기존 정책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안함.

- [복원력 제고 및 공급망 강화] EU 산업전략, 「핵심원자재법」, 「유럽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유럽방위 기술 및 산업기반 전략, 단일시장긴급조치 등 이미 제안되었거나 새롭게 추진 중인 정책수단을 제시함.
  - [EU 산업전략] 청정기술, 원자재, 반도체,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단일시장의 탄력성 강화<sup>6)</sup>
  - [핵심원자재법] EU의 핵심 원자재 추출,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sup>7)</sup>
  - [유럽반도체법]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 차원에서 통합 생산시설 구축, 위기대응 체제 마련 등 제시<sup>8)</sup>
  - [기후중립산업법] 기후중립기술 제조의 규모 확대에 기여<sup>9)</sup>
  - [단일시장긴급조치] 공급망 교란과 같은 향후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제품의 가용성과 자유로운 유통 보장<sup>10)</sup>
  - [전략적 기술 유럽플랫폼]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청정, 바이오 분야의 공급망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목적으로 유럽플랫폼 전략기술(STEP,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제안<sup>11)</sup>

5) 기후중립은 이산화탄소 이외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EU 정책에서 사용되는 넷제로(Net-zero)와 같은 개념임. 기후중립 산업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산업군을 의미함.

6) European Commission(2021), "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pe's recovery," COM(2021) 350 final.

7) European Commission(2023),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in support of the twin transition," COM(2023) 165 final.

8) European Commission, "EU Chips Act triggers further €7.4bn investment i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Europ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3\\_2505](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3_2505)(검색일: 2023. 6. 28).

9) European Commission(2023),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COM(2023) 161 final; 장영욱 외(2023), 「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Vol. 23,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European Commission, "The 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single-market-emergency-instrument\\_en](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single-market-emergency-instrument_en)(검색일: 2023.6. 27).

11) European Commission, "EU Budget: Commission proposes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STEP) to support european leadership on critical technologi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36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364)(검색일: 2023. 6. 25).

### 글상자 1. 유럽플랫폼 전략기술(STEP)

- 유럽플랫폼 전략기술(STEP)의 목적은 유럽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기후중립으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있음.
  - STEP은 디지털, 딥 테크(Deep Tech), 청정기술,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혁신기술의 개발과 제조의 활용 및 확장을 지원함.
  - EU는 이미 해당 산업 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여 시행 중인데, STEP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EU 예산상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둠.
    - 새로운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데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기존 정책수단 활용 시 좀더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EU 자금 활용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
    - 하나의 개별 프로젝트가 STEP의 지원으로 EU 내 다양한 자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STEP은 일련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이후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A, Open Strategic Autonomy)을 제고하기 위해 EU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내에서 다양한 재원과 기금을 활용
  - 연구개발예산(Horizon Europe), InvestEU(EU 중요 인프라 지원), EU 혁신기금, 유럽방위기금,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Digital Europe 등이 STEP 프로젝트에 활용됨.
    - InvestEU의 경우 30억 유로, Horizon Europe에 5억 유로, EU 혁신기금에 50억 유로, 유럽방위기금에 15억 유로를 추가 증액
  - Sovereignty Seal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STEP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증해주는 것은 물론, EU 자금 활용을 수월하게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Sovereignty Portal을 운영할 계획임.
    - 이 포털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인증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

그림 1. 유럽플랫폼 전략기술(STEP) 운영



- 주: 1. EU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는 EU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STEP에 대한 감독 수행.  
 2. STEP팀은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EU 기금의 적용과 활용에 대한 자문, 'Sovereignty Seal' 사용 제고.  
 3. 산업자문가 그룹은 EU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STEP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후 발효될 예정이며, EU 내 기금에 따라 추가적인 일정이 적용될 수 있음.
  - EU 내 기금의 경우 STEP 우선순위를 선반영해야 하는 조정작업이 요구되거나 STEP 프로젝트 관련 협약이 새롭게 채택되어야 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 Budget: Commission proposes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to support European leadership on critical technologies"(검색일: 2023. 6. 30); European Commission, "Sovereignty Portal"(검색일: 2023. 6. 30).

- [경제안보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재검토 및 새로운 정책 마련을 통해 경제안보의 위협에서 EU를 보호하고자 함.
  -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 및 통상위협 대응] 제3국의 불공정한 정책 및 관행이 경제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구제조치(Trade Defence Instrument)의 엄격한 사용과 역외 보조금 규정을 시행
  - [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바운드 투자 규제] 발효 중인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EU FDI Screening)의 개정안을<sup>12)</sup> 2023년 말까지 마련하고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EU 회원국에는 도입을 촉구<sup>13)</sup>
  - [기술보안 및 기술유출 대응] 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지원 및 EU 표준화 전략 시행을 통해 표준화 부문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sup>14)</sup>
  - [인프라 관련 경제안보 보호] 개정된 지침을 통해 핵심 인프라(에너지, 운송, 보건, 디지털, 물 및 식품 등)의 물리적 및 디지털 복원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시행 중<sup>15)</sup>
  -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관련 조율] 군사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서 EU 회원국간 조정이 요구되는 만큼 2023년 말까지 EU 차원의 수출통제 관련 제안을 제출할 계획
  -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역외 투자의 경우 특정 기술 및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안보 위협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전담 그룹을 구성

## 글상자 2. EU 이사회의 EU 경제안보전략 논의 주요 내용<sup>16)</sup>

- EU 이사회는 2023년 6월 29~30일 회의를 갖고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경제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여기서 '중국은 EU의 파트너이자 경쟁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중국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식을 논의함.
- EU는 공정한 경쟁의 장 보장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균형 잡히고 호혜적인 이익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함.
  - EU는 베르사유 선언에 따라 공급망을 포함한 중요 의존성 및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sup>17)</sup>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위협을 제거함.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국과의 인권대화 재개를 환영함.
- 이밖에도 민간 분야에서 산업정책의 강화와 함께 전략적 종속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조성 추진함.
  - △현재의 입법주기 종료 전 「기후중립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합의 도달 △EU의 인공지능 개발 관련 위험 감소 △유럽 내 중요 의약품 및 그 부분품의 충분한 생산과 가용성 보장 △통합 특허법원 협정의 발효 및 단일특허제도 운영 개시 환영 △2024년 3월 회의 시 노조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및 성장을 증대를 위한 첫 번째 연례보고서 검토 기대, 단일시장의 미래에 대한 독립적인 고위급 보고서 요청 △유럽의 경쟁우위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제시 요청
- EU 이사회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EU 및 회원국의 대응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과 개선작업을 지속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함.

12) 오태현 외(202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 European Union(2019), "Regulation (EU) 2019/452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14) European Union(2022), "An EU Strategy on Standardisation Setting global standards in support of a resilient, green and digital EU single market," COM(2022) 31 final.

15) European Union(2022), "Directive (EU) 2022/2555 o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cross the Union," amending Regulation (EU) No 910/2014 and Directive (EU) 2018/1972, and repealing Directive (EU) 2016/1148 (NIS2 Directive).

16) European Council(2023), European Council Meeting (29 and 30 June 2023) - Conclusions. EUCO 7/23.

- [경제안보 협력] EU 단독으로 경제안보를 달성할 수 없고 정책대응도 일방적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국가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함.
  - 경제안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력으로 미국과 인도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무역기술위원회를 운영 하는 것은 물론 G7이나 G20, UN 등 다자간 협력에 참여
  -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동맹, 원자재 파트너십, 원자재 클럽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

### 3. 평가 및 시사점

- 변화하는 국제 정치질서하에서 EU가 미국, 중국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요 국제 정치·경제 이슈에서 독자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전략의 내용을 두고 비판적인 평가도 상존함.
- EU 경제안보전략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의 EU 경제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수준의 경제적 개방성과 역동성을 유지하려는 EU의 대응으로 분석됨.
  - 특히 ‘중국에 대한 완전한 배제(de-coupling)가 아닌 위협의 최소화(de-risk)’라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전략적 고민이 반영되었다는 평가임.<sup>18)</sup>
- 반면 EU 경제안보전략에서 제시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의 재검토,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규제, 기술유출 가능성 우려 등이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것이 아닌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제기됨.<sup>19)</sup>
- EU 차원의 경제안보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함.
  - 경제안보전략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과정에 난관이 예상됨.<sup>20)</sup>
    - 경제안보전략 초안에는 경제안보, 위협과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경제안보전략이 경제와 안보의 불가분성에서 비롯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EU 회원국 및 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함.<sup>21)</sup>
    - 경제 이슈의 경우 EU 집행위원회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안보 이슈의 경우에는 회원국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의 결합에 따른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간 갈등이나 상이한 접근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함.

17) 베르사유 선언(The Versailles Declaration)은 2022년 3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방력 강화, 에너지 의존도 감소, 보다 강력한 경제기반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2), Informal meeting of th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 The Versailles Declaration.

18) AP(2023. 6. 20), “EU unveils plan to protect economies from fivals. China is a focus, but is not named in the proposal,”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6. 28).

19) Chinadaily(2023. 6. 30), “EU’s economic security strategy misguided and self-damaging,”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7. 1).

20) Reuters(2023. 6. 20), “EU launches debate on economic security with eye on Chin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7. 1).

21) Financial Times(2023. 7. 2), “The EU must realise that economic security begins at hom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7. 3).

- 뿐만 아니라 EU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전략이나 비즈니스 전략이 상이한 만큼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하는 데 기업들의 동의는 필수적임.
- EU 경제안보전략상 정책수단의 구체화가 지연될 가능성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두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 EU 경제안보전략의 최종 채택 과정에서 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략은 국제환경에 대한 관찰과 대응에 기인하는 것이지 중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전환은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sup>22)</sup>
- EU의 경제안보전략 추진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하기 위해 정부간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과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23년 5월 22일 한국과 EU는 정상회담을 통해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sup>23)</sup>
  - 한국과 EU는 장관급 주재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First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갖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23. 6. 30).
  - \*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에서 합의했던 협력과제 중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5G/6G,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등 6개 우선 추진 상황을 점검함.

KIEP

22) Politico(2023. 6. 19), “EU’s trade ideals face ‘economic security’ reality check”(검색일: 2023. 6. 27).

23)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3. 5. 22), 「한·EU 정상, ‘그린·보건·디지털’ 3대 파트너십 강화 합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7. 5).